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4월혁명 45주년 논집

---

# 자주통일의 길

---

자 료



## 4월혁명 35주년 선언문

해방·분단 50년과 4월혁명 3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1945년 일본군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숙청·척결되었어야 할 친일세력과 역대 독재정권을 뒷받침한 미국의 비호 하에 형성된 민족반역 수구세력은 지금도 거래의 사명인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더구나 4월혁명에 의하여 이미 역사의 단죄를 받은 독재자 이승만과 군사쿠데타의 원흉인 박정희의 유령을 수구세력의 잔당이 또다시 떠받들고 나오는 일련의 망동은 신대동아공영권을 외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반역행위로서 분노와 경계를 금지 못하게 하고 있다.

80년 5월 광주에서 대학살을 저지르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과 야합하여 정권을 이어받은 김영삼 정부는 수구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군사독재와 다를 바 없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봉적인 '개혁'에 이어 허구적인 '세계화' 구호를 내세워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행, 수많은 중소기업을 파탄시키고 노동자, 농민과 서민대중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미·소 냉전 구조가 무너져 민족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조성되고 있는 차제에 정부는 매년 군비를 증강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사들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남북대결을 고조시키고 있다.

7천만 겨레가 외세를 물리치고 화합단결하여 자주·민주·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길만이 민족이 영원히 살고 번영하는 첩경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자주통일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평화통일의 이정표가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민간의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대 독재집단이 정권연장을 위해 안보를 빙자하여 갖은 방법으로 통일운동을 억압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애국적 양심세력은 대동단결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을 철폐하고 자주·민주·통일을 달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싸우다 무참히 희생된 애국영령들은 그 얼마이며, 강물지어 흘러간 피는 그 얼마인가. 4월혁명 광장에서 살아남은 우리는 산화해 간 동지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들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천명한다.

- 남북당국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즉각 실천하고 대화, 교류의 창구를 개방하여 애국 민주인사들의 통일운동을 겹겹히 받아들여라
-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영원히 중단하고, 42년 동안

지속된 휴전상태를 종결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즉각 석방, 해제하라

- 민족반역 수구세력은 이승만, 박정희 되살리기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4월혁명 만세! 자주·민주·통일 만세!

1995년 4월 19일

사월혁명연구소 회원 일동

## 4월혁명 36주년 선언문

1960년 4월의 광장에서 만난 우리는 민주화와 통일을 이루지 못한 통환을 안고 오늘 4월 혁명 36주년을 맞는다. 뜨거웠던 우리의 열망이 5.16 쿠데타로 무참히 유린된 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하에서 양산된 수구세력은 지금도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완강하게 가로막고 있다. 신군부세력과 야합해 탄생한 김영삼 정권에서도 허울뿐인 개혁 또는 세계화라는 구호하에 반민주·반통일적인 체제가 더욱 공고하게 구조화하고 있다.

군사세력과의 단절을 거부하던 김영삼 정권은 국민의 열화 같은 요구에 굴복하여 12.12와 5.18 관련자를 재판에 회부했으나 현 정권의 역사청산 작업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갈수록 허구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 정권이 내세우는 개혁의지도 즉흥적인 국면 전환책과 당리당략을 위한 거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실명제 등 일련의 개혁조치와 사정조치는 허구였음이 입증되었고 숙정 대상자들은 4.11 총선이라는 요식적인 면죄절차를 거쳐 대거 체제에 재편입되고 있다. 재벌 편중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도산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으며 농촌은 죽어가고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는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현 정권은 3자개입 금지의 굴레를 씌워 노동운동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으며, 민주화 투쟁의 소중한 결실인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승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현 정권은 민족문제에서도 과거 군사정권의 반통일 정책을 물려받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간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개입으로 민족적 위기를 맞고 있으나, 정부는 일관되게 미·일과의 공조체제에만 매달림으로써 민족자주의 길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군비증강과 대결체제의 강화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부합될 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남북간의 민간교류는 여전히 차단되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통일운동가들이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4월혁명 36주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도 민족·민주 과제의 실현이 암담한 오늘의 현실에 대해 산화해간 동지들의 명령 앞에 자괴와 참회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자주·민주·통일을 이룩하는 것만이 4월혁명 완수의 길임을 굳게 믿는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정부는 남북간의 이간과 대결을 부추기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탈피하여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평화협정 체결·군축·남북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와 수배

자들을 석방, 해제하여야 한다.

3. 현 정권은 재벌 편중 경제정책을 탈피하여 중소기업인과 농업을 살리고 도탄에 빠진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하는 민생 위주의 민주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철저히 처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직도 이 나라의 각 부문을 장악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5.16 쿠데타 잔존세력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4월혁명 만세! 자주·민주·통일 만세!

1996년 4월 19일  
사월혁명연구소 회원 일동

## 4월혁명 37주년 선언문

4월혁명! 그것은 이 땅에 인간존엄의 기본선을 그어 놓은 장엄한 역사의 기록이었다. 37년 전 오늘 학생들의 애국 열정에 의해 점화된 4월혁명의 불꽃은 그 전개과정에서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번져 자주·민주·통일의 불기둥으로 승화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현정사는 그 이후 4월혁명 정신에 따라 그 선악시비를 가리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5.18, 6.10 등의 민중항쟁을 통해 반민주세력을 역사 앞에 끌어앉히고 4월혁명 정신에 따른 바른 현정을 기대하였으나 사태는 역전되어 권력에 눈이 어두운 3당합당과 그에 이은 사이비 문민정권을 보게 되었다.

이런 계기로 태어난 김영삼 정권은 급기야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극치를 보여준 한보사태를 연출하는 한편, 한낱 사인에 불과한 김현철은 공사영역의 분별없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자는 공화정의 윤리를 파괴하고 지배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세계화를 빙자한 재벌 중심의 경제는 군정 이후의 시장권위주의를 답습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 외채누증, 환율인상, 중소기업 도산, 실업의 양산으로 이어져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한편, 이러한 위기사태의 부정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은 법을 지배도구로 악용하는 법기술(法奇術)을 농함으로써 아무도 이 나라의 법률을 믿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미·일의 대한반도 정책은 외견상 평화와 연착륙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실상은 분할지배와 세계적 규모의 축적에 있어 민족의 통일문제를 미·일에만 의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일 일변도 외교에 매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여 민심은 이미 정권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합종연형의 권력을 일삼고 있으며, 안기부법의 개악으로 냉전이데올로기의 부활을 꿈꾸고, 금융실명제의 후퇴로 도둑의 면책이나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난국은 야권도 악을 함께 나누어 가진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4월혁명 정신을 배신한 김영삼 정권의 이 말기적 현상에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4월혁명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반4월(反四月)의 총체적 위기를 단죄코자 한다.

- 민심의 이반을 몰고 온 김영삼 정권은 즉시 퇴진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이 총체적 위기를 수습하라!
-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나 황장엽 리스트를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
-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부정비리의 공명정대한 척결로 법집행을 국민적 수요에 합당하



게 하라!

- 세계화가 재벌의 세계적 축적 기회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인과 농어민,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의 정도를 가계 하라!

- 외세의존적 통일정책과 냉전구조적 통일정책을 지양하고 민족자존의 대의에 따른 통일정책을 지향하라!

1997년 4월 19일

사월혁명연구소 회원 일동

## 4월혁명 38주년 선언문

1960년 4월 젊은 학생과 시민들은 목숨을 바쳐 이 땅에 자주·민주·통일의 이정표를 높이 세웠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혁명정신을 올곧게 지키지 못하고 국제금융독점자본에게 경제주권을 내놓음으로써 민족적, 민중적 위기를 맞고 있다.

5.16 쿠데타 후 군사정권은 개발독재의 이름으로 민중적 참여를 배제하더니, 6월항쟁 후에도 수구기득권 세력과 소수 사이비 문민세력간의 눈가림 협약으로 다시 한 번 민중을 배제하였다.

이 틈을 비집고 변형적 3당야합으로 태어난 김영삼 정권은 군사정권 이래의 반민주적 적폐와 자신의 무능을 보태어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물경 2000억 불 외채에 따른 IMF 신탁통치가 그것이다.

경제신탁통치 국치문서는 국제금융독점자본가 세력에게 우리나라의 자본·금융시장을 모두 개방해 주었다. 이후 우리 경제는 국제투기자본과 기업사냥꾼의 세상이 되고 있다. 패권국가들의 자본의 세계화가 아무런 간섭 없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실로 경제주권을 탈취당한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재산을 횡령한 도둑들이 이제 와서 국가 경제위기를 들먹이며 그 돈을 한 푼도 손대지 않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대중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여 같이 판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돈을 사사로이 멋대로 처분하다 파탄에 이르게 한 자들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감히 들먹일 수 있단 말인가.

외채의 실질적 책임은 무능정부, 부패정치, 관치금융, 독점재벌, 권언유착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채해결의 고통을 짊어진 것은 국민대중과 중소기업, 그리고 극한상황에 내몰린 실직자다. 국제경쟁력을 높여 경제회생을 이룬다는 구실로 재벌은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노사정협약은 노동자 무더기 해고의 길을 터주었고 재벌의 면책으로 귀착되고 있다.

개발독재 하에서, 변형적 문민정부 하에서, 급기야 IMF 체제 하에서 배제당한 소외세력의 실상을 보라. 실직가장과 가족의 집단자살, 절도·강도범의 증가, 노숙자의 범람, 돈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실직가정주부들의 행렬, 이것은 경제파탄이 몰고 온 사회적 반영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4자회담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의 통일염원보다는 패권국가들의 시장지배욕구가 더 강해 분할지배의 현상유지로 끌려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민족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대화와 화해, 협력으로 자주적 통일기반을 조속히 닦아야 한다.

4월혁명 38주년을 맞는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자주·민주·통일의 4월혁명 완수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범죄의 실상을 공개하고 범죄자를 모두 사법처리하라!
-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 실업자,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국제독점자본의 실체를 폭로하고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적 연대를 일구어내자!
- 새 정부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싸우다 투옥된 이 땅의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 외세의존적 통일정책을 지양하고 민족자존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라!
- 북풍의 실상을 공개하고 모든 용공의혹 조작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라!

4월혁명 만세! 자주·민주·통일 만세!

1998년 4월 19일  
사월혁명연구소 회원 일동

## 사월혁명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8.15 광복으로 펼쳐진 민주공화정의 새나라 염원을 4월혁명으로 쟁취할 수 있었던 역사 진보의 거대한 승리가 패권주의의 분단반공의 하속배로 길들여진 군사파쇼무리에게 불법적 쿠데타로 도탈당한 이래, 민족과 민중의 심장에 안겨진 활화산 4월혁명 투혼이 있어, 그리고 불요, 불굴, 불절의 4월혁명 사수의 가열한 투쟁이 있어 4월혁명의 금자탑은 우리의 진지로 엄존하고 있다.

4월혁명은 부마민중항쟁으로 내화하여 기어이 박정희 유신통치를 종식시키고, 4월혁명은 5월 민중항쟁으로 환생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을 원천적으로 사형선고에 처하고, 4월혁명은 6.10 민주항쟁으로 부활하여 노태우 군사정권, 김영삼 사이비 문민정권을 민중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4월혁명의 혼맥은 선거혁명으로 침잠되어 현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케 했다.

민족의 자주권과 민중의 참정권이 극우, 수구, 보수, 기득의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차선의 기존 정당세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규정성으로 민족역량, 민중·민주진보 역량으로서의 노동자·농민·중소자산가·소시민·지식인·청년세대·학생대군·소의계층·차별 지역민이 민주화 여정에 동반, 동참했던 야당세력에게 힘을 몰아주어 국민주권 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4월혁명의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가 아닐 수 없다. 현하 ‘국민의 정부’의 참뜻은 시혜적 통치집단의 뜻이 아니라 국민대중이 만들어 내고 국민대중이 견인하는 국민대중이 중심자리에 서 있는 정부라는 진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대중은 오늘의 정치구도에서 적극 참가, 공동책임의 지분과 권리가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기대도 포용도, 반면에는 갈등과 실망도 응당 교체되는 것이다. 실로 국민대중은 김대중 정권에 대한 단순한 의탁자나 추종자가 될 수 없는, 솔로몬의 송사에서 나오는 생모의 애환을 안고 사는 역사의 주체, 민족공동체의 주인, 국민수입권력에 대한 동반자, 감시자, 심판자인 것이다.

오늘의 민족 명운은 국제금융자본, 그것도 세계체제의 초강대국 미국의 후견에 지원받는 고리대의 뒷에 단단히 걸렸다. 이것은 단순한 외환위기, 경기순환적 경제위기, 나아가 뒤틀린 국민경제의 구조적 위기만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미·일의 선진자본주의 호황국면의 과잉자본의 하치장으로 선택된 후진국에의 자본수출과 그 대리집행자로서의 군사정권, 그리고 이른바 개발독재의 착취와 잉여의 유출이 귀결된 민족경제의 필연적 파탄이다. 민족경제의 파탄은 민족주권의 상실, 민족주권 상실은 민족공동체의 해체를 예시하는 적신호이다.

오늘의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없으며, 언필칭 이것을 기회라고 한다. 위기의 실체는 미·일 강대국과 국제독점 금융자본, 그리고 그것에 의탁하여 정경유착으로 공생한 독재정권과 독점재벌의 축적구조의 위기이며, 지배블럭은 최대한 이윤창출 기회의 호기를 간단없이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민중생존권, 민족경제 파탄을 압박하는 위기적 공세를 뒤집어 보면 민족·민주·민중 역량의 승리적 반전의 진정한 기회가 아닌가.

현 단계에서 세계체제 하 지배대국 독점금융자본의 모순은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돌입하고 세계공황을 예고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일 공동지배구도는 결정적으로 균열되고 미·중 각축구도는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선·중·후진국 자본 금융시장 일체를 기득권 수호질서로 강박함으로써 동반고통, 동반몰락을 압박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선택은 사멸과 재편의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 역사의 향방은 20세기 초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동아시아 불균등발전론에 대체하여 적확하게 제시한 균등적 공동번영의 이상이 세기의 시련 끝에 부상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 속에서 자율적인 독자적 지역범주이며 한민족은 이 속에서 주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를 사는 사람들은 호혜평등과 공동협력을 통하여 공생공락하는 미래세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한민족은 동아시아를 새로이 태어나게 하는 산과역으로서의 결정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것이 국제독점금융자본의 사슬과 IMF 강제로부터 진정 회생 자활하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는 자결적 지향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위기는 일제 식민통치 50년, 20세기 후반기 또 다른 50년 종속구도를 혁파하는 1백 년의 통환을 씻어내는 거대한 역사의 용트림이다.

우리에게 부과된 민족민주운동의 과제, 자주·민주·통일의 과업도 이제 선명해 온다. 이것은 결코 지금 왜소한 재야로 폄하된 작은 목소리도 아니고 그 어떤 편향되고 과도한 집단적 이해의 대변도 아니다.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4월혁명의 계승과 완수의 행보는 민중의 이익, 민족의 이익,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 나아가 세계의 이익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 사회진보와 민중복리, 그리고 평화와 창조의 전체상이다.

우리 사회경제의 개혁은 마땅히 이와 같은 대명제에 종속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 통일의 진전도 마땅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대승적 전환이어야 한다.

때를 놓치지 말고 시간을 늦추지 말고 낡은 적폐를 혁파하고 총체적 변혁의 새 지평으로 나아가는 개혁의 행보를 다그쳐야 한다. 여기에 수반되는 과제를 놓치지 말자. 국민경제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 정리해야 한다. 부정부패와 부정축제는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칼질한 범죄는 신상필벌해야 한다. 복고반동의 책략을 포기하고 진정 국민에게 사죄하는 역사적 죄과와 축제는 국민의 용서와 환수로 정돈하자.

이와 같은 과거청산의 기저 위에서 역사적 고난과 시련을 감내하는 공동체로서 국민공화체를 응집시키자. 그리고 우리 민족공동체에의 애정과 고뇌에서 발원한 다른 의견, 다른 사상, 다른 주장의 대립적, 대결적 과거사는 모두 마감의 대단원을 긋고, 특히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 그리고 정치적 수배자를 다 방면하여야 한다. 특히 자주와 통일, 민주와 민족의 가치론으로 사는 청년, 신세대, 학생, 지식인에 대한 창조적 예지와 실천적 모색에 대해서

기득과 타성의 법과 규율로 낡은 통제의 관행을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의 활성화, 젊은 역군의 에너지와 이반한 권력은 반드시 역사의 반동으로 낙인된다는 경험칙을 엄중히 상기시킨다.

20세기를 자주·자립·자강하여 살아오지 못한 우리 민족에게 이 전환기에 있어서의 대명제는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이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 없는 민주주의도, 통일 없는 자유·평등도, 통일 없는 복지도, 통일 없는 인권도 태생적 소아마비일 뿐이다. 통일운동에 대해서 정책의 대전환, 대개혁 개방의 장을 열어야 한다.

지금부터 1백 년 전, 1898년 무능 왕조정부는 국호도 명실상부치 못한 큰 대(大)자를 붙이고 광무개혁의 공념불을 읊어대고 구걸적 외자도입, 무차별적 경제이권 할양으로 끝내 국권상실의 국치를 초래하고, 20세기 식민지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오욕의 역사는 되풀이될 수 없다.

4월혁명의 국민승리의 초석은 튼튼하고 투쟁을 통해서 축적, 성장해 온 민족역량, 민주역량, 민중역량은 지금 사회개혁과 통일의지로 낙관적 21세기를 견인하고 있다. 4월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반드시 자주·자립·자강의 민족경제, 국민공동체의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주저할 여유도 다른 대안도 없다. 21세기를 민족공동체 중심의 세계화 시대를 맞을 수 있는 전반기에 문제는 주체적인 대비와 결단, 그리고 역사진보에 순행하는 민족민주역량의 결집이 있을 뿐이다. 우리 사월혁명회는 불의에는 타협이 없으나 민족공동이익, 공동선에는 한없이 넓고 너그럽고 파사한 품으로 역사창조의 새 주력군을 이끌어 아우러 낼 것이다.

1998년 6월 18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 4월혁명 39주년 선언문

오늘 4월혁명 39주년을 맞아 장년의 연륜에 접어든 4월혁명 동지들은 이승만 부패 독재 권력 타도를 외치던 그때의 투혼으로 유명을 달리한 4.19 영령의 통한을 안고 다시 한 번 4월혁명의 완수를 다짐한다.

4.19 학생 쫓기는 4.26 국민항쟁으로 끝내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으나 혁명의 주체 세력이 정권 수임으로부터 괴리됨으로써 자주·민주·통일의 4월혁명 목표를 쟁취하지 못하는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5.16 쿠데타 반동이 덮칠 때까지 13개월간은 민주화와 통일운동, 그리고 전반적 사회개혁의 씨앗을 뿌리고 물꼬를 튼 민족민주혁명의 대장정이었다.

4월혁명은 부마민중항쟁으로 재생하여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을 타도했고 4월혁명은 광주 민중항쟁으로 승화되어 이 땅에 불멸의 민주 금자탑을 세웠고, 4월혁명은 6월항쟁으로 계승되어 군사정권의 악순환을 척결했다. 4월혁명은 발전적 문민정권과 현하 평화적 교체정권의 산파역이며 근원적 추동력이다. 개혁과 통일이 전진되는 오늘의 정치 지형은 4월혁명의 역사적 광장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국민주권 수임의 김대중 정권은 4월혁명의 최대의 수혜자이며 최대의 채무자이다.

대선에서의 국민의 선택은 민주화와 개혁의 결단이었으며 결코 DJP 권력 분점과 이른바 내각제 권력구조 재편의 수평적 정권 양여의 선택은 아니었다. 우리 4월혁명의 주역들은 오늘 공화제 헌법의 근간인 4월혁명 정신을 압살한 헌정 파괴의 주범인 유신본당이 이른바 공동정권의 중추에서 일말의 역사적 사죄도 없이 쿠데타의 망령을 안고 국민 앞에 군림하는 것에 분통을 참을 수 없다.

심지어는 수유리 4월 영령 앞에 뻔뻔스럽게 서는 것은 살인자가 주검 앞에서 조사를 읽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IMF 신탁을 초래한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를 DJP 공동정권이 양수검장으로 치켜 올리는 것에서 어떻게 경제파탄의 본질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심지어 12.12 반란자·5.18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역사의 온갖 오물들과 야합하는 권력의 행태, 그것도 가시밭길 민주화의 길에 동참했던 새 정권이 역대의 과거 정권이 답습했던 정권 안보에 매몰되어 가는 것에 실로 국민의 환멸을 떨칠 수가 없다.

과거 청산 없이 개혁 없고 주도적 민중 참여 없이 개혁 없다는 것이 역사의 철리이다. 위대한 4월혁명의 중심 자리에 서 있는 민중이 경제회복의 빌미로 고통과 고난을 몽땅 뒤집어쓰고 있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인간 존엄과 민족 이익 그리고 국제 규범에도 어긋

나는 냉전논리의 구체제 악법질서에서 여전히 민주화와 통일의 처절한 절규를 외쳐야 하는 것도 정상(正常)이 아니다. 민족 염원의 화신인 청년 학생의 이상 추구하고 기상이 아직도 이적으로 매도되고 처형으로 압박되는 것은 21세기도 밀레니엄도 가로막는 미래에 대한 파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사회는 늙은 세대가 천만년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다시 가학자로 나타나는 야만사회가 될 수 없다.

오늘의 진정한 국난 극복의 함의는 무엇인가. IMF 총독부가 시키는 대로 빚을 꼬박꼬박 갚고, 모자라면 또 빚을 꾸어오고, 노동자 고혈 빨아 파는 상품 그것도 별이가 없으면 일자리 목 줄 마음대로 잘라버리게 하는 처방이 인간 세상의 위기 해결책일 수 없다. 사람이 죽고 국민이 짜부라지는 국난 극복은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현대사회의 순리(順理)가 아니다. 사악한 권력과 부패한 자본이 일을 저질러 놓았다면 나라 망쳐 놓은 정치 비리와 재벌 범 죄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부정부패의 과녁에 관료가 덩터기로 있다면 관료가 개혁의 주체라는 말은 걷어치우고 마땅히 일차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민족 주체성과 민족 정기, 민족 주권과 민족 이익을 갉아먹는 외세의 독소, 그것의 가장 강력한 침략 첨병인 금융자본과 그 길잡이 매판자본의 영생을 위해서 민중이 간, 쓸개까지를 다 바쳐야 할 의무는 없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국제 투기금융자본이 저질러 놓은 피해는 반반으로 나누어 탕감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온 국민이 외채갈이에 제 살 제 살림을 바치던 지난해에도 외국 투기자본은 100억 달러나 해먹고 튀었고 재벌은 자산과 시장을 더욱 독식해 갔고 정부는 빈익빈 부익부를 비호해 가고 있다.

우리 4월혁명 주역들은 국민 대중에게 호소한다. 4월혁명이 제시한 자주·민주·통일의 성전(聖戰)에 다시 전열을 갖추자는 것을!

또한 김대중 정권에게 충고한다.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전환기에 4월혁명의 대도(大道)에서 한 치 이탈 없이 민중의 4월혁명 완수의 길을 앞서 정리해 주기를!

4월혁명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은 민족 향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들 4월혁명 주역들은 불굴의 4월혁명 정신으로 4월혁명 40주년이 되는 2000년에는 기필코 4월혁명을 완수해 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미·일 군사 핵공조 한반도 평화 위협 중단하라
- 매국적 한일 어업협정 무효화하라
- 반민족적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민주 인권 보장하라
- 민중 생존권 박탈하는 정리하고 중단하라
- 농가부채 해결하고 식량안보 확보하라
- 재벌독재 해체하고 부정축재 환수하라
- 기간산업 방매 말고 투기외자 막아내라
- 부패정치 혁파하고 수구야합 해체하라



- 노동자참정권 보장하고 진보정치 일구어내자
- 민중주도 평화통일 민족 주권 쟁취하자

자주 · 민주 · 통일 만세! 4월혁명 만세!

1999년 4월 19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 4월혁명 40주년 선언문

1960년 4월 19일, 우리는 이승만 친미 매국 독재정권을 타도하였다. 4월혁명은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해방, 민족의 자주 독립과 통일을 일구어 내려는 전 민중적 결의에 찬 투쟁이었다.

4월혁명 40년을 맞이하는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선언하고자 한다.

새 천년의 첫해를 맞는 지금 우리 민족의 현실은 근세 이래 지속되어 온 외국침략세력의 멍에를 벗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올라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 식민지적 성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분할지배 논리를 배경으로 한 매국적 지배세력은 우리 민중을 억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영구분할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40여 년 동안 흉악한 일제통치 하에서 신음하였던 우리 민족이 아닌가. 더불어 8.15 이후 미국의 사주 아래 친일 매국세력들을 끌어들이어 급조한 이승만 정권은 물론, 4월혁명을 무력으로 짓밟고 권력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과 그 후예들인 5, 6공 군사정권, 그리고 쿠데타와 유신잔당세력과 야합한 문민정권, IMF 신탁통치와 함께 등장한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외세는 반통일 보수기득권을 앞세워 이 나라 이 민중을 지배하고 있다.

8.15와 더불어 강점한 미군은 반세기가 넘도록 무기한 주둔하고 있으며 군사작전권을 거머쥐고 군사기지 사용료를 물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주둔비용까지 강요하고 있고,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광범위한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 보수기득권 세력은 정권안보를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통일 후에도 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망언을 일삼고 한·미·일 정책공조를 더욱 정례화하여 합동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외세에 대한 굴종과 예속을 관철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제3세계 나라들의 국가장벽을 무너뜨리고 초국적 자본에 의한 전 세계 민중을 수탈대상으로 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화 이데올로기임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실업자를 양산하며 자본과 농산물시장을 무한정 개방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 심지어 기간산업까지 해체하여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를 찬양하는 매국세력은 이중국적 취득과 자녀의 외국유학을 당연시하고 영어 조기교육과 조기 유학허용, 영어의 공용화까지 들먹이며 추진하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 역시 외국자본의 침투와 세계화가 나라의 살 길이며 발전인 양 떠벌이고 미국, 일본의 저질 퇴폐문화를 거리낌없이 선진문화인 양 대대적으로 전파하여 민족자주·자존의식을 말살시키고 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청소년들을 식민지의 나약한 대중으로 길들이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민족·민중·민주세력은 동학농민전쟁 이후 항일투쟁과 4월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중항쟁, 6월 민주민중항쟁, 범민족자주통일운동으로 외세와 지배세력에 대항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이제 우리 4월혁명 세대는 새 천년의 첫해인 올해를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과 평화적인 통일을 완성시켜내는 4월혁명 완결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한 세기에 걸친 외세를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어 4월혁명 영령과 애국 애족선열의 고귀한 피에 보답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6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민족적 여망에 따라 민족사적 대전환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외세 단절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동족을 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월혁명회 회원들은 4월혁명 40주년을 맞이하여 외세 없는 민족자존의 자주·민주·통일만이 우리 겨레의 살 길임을 7천만 겨레에게 밝혀 다시 한 번 선언하는 바이다.

4월혁명 만세! 자주·민주·통일 만세!

2000년 4월 19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 4월혁명 41주년 선언문

- 자주·민주·통일만이 살 길이다 -

우리 현대사는 외세와 압제자들로부터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함께 일어섰던 찬란한 민중투쟁의 역사였다. 특히 위대한 4월혁명은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근원이요 힘의 원천이었다.

4월혁명 41주년을 맞아 올해가 민족통일운동의 도상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통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고자 한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자주와 원칙 아래 외세의 간섭 없이 연방제통일을 이룰 것을 천명, 민족통일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부시 정권이 등장한 이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정권은 북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북을 희생양으로 해서 세계를 군비경쟁으로 몰아넣을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개약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이 얼마나 오만한 나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새협정은 미군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정부가 신선했다고 자랑하는 환경조항마저 오염된 환경을 원상 복구할 의무조항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고서도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부시 정부의 기도에 장단 맞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대주의 수구반통일 세력들은 통일운동과 개혁의 발목을 잡고 한반도를 다시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IMF 통치체제 3년 만에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일군 기업들이 헐값으로 외국 독점자본들에 팔려나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외세의 뜻에 따라 소위 개방농정을 펴고 있는 현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은 농민들을 살인적인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농업을 파탄내고 있다. 그리고 일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도시빈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권력싸움에만 몰두할 뿐 민생 안정과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마저 수구세력들에 의해 실종된 지 오래다.

민족민주세력이 자주·민주·통일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지 못한다면 분단 50년 만에 맞이한 조국통일의 호기가 다시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다.

그러나 매항리 미군 폭격장 폐쇄투쟁과 노근리 등 미군 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에서 그 저력을 보여준 우리 민중들은 남북통일 실현에 위기를 조성하고 분단을 강요하는 미국의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단결을 합의해 놓고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채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가로막고 사회민주화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을 올해엔 기필코 철폐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수한 항일독립군의 위령탑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왜군 장교 출신으로 독립군을 학살한 매국노이며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월혁명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박정희의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파렴치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이 일말의 역사의식이 남아 있다면 마땅히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국고지원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그 명예총재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4월혁명 세대는 민족의 분단을 끝장내고 4월혁명을 완결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자주·민주·통일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족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한반도에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외세를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어 민족통일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4월혁명 영령과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피에 보답하는 길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우리 4월혁명 세대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동족을 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을 압살하는 신자유주의 망령 추방투쟁에 온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 사월혁명회 회원들은 4월혁명 41주년을 맞이하여 자주·민주·통일만이 우리 겨레가 살 길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4월혁명 만세! 자주·민주·통일 만세!

2001년 4월 19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 4월혁명 42주년 선언문

- 4월혁명 정신으로 자주·민주·통일 이룩하자 -

지금 한반도에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지도 모를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에 부시가 대통령으로 등장한 이후 6.15 공동선언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남북화해와 통일 기운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전쟁의 해' 선포 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쟁책동은 우리 민족 모두를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IMF 식민통치 체제 4년 만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 땅의 민중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0%를 넘어서 항상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처해 있다. UR, WTO 등 세계화 압력에 짓눌려 빗더미에 올라 앉은 농민들은 이제 민족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쌀농사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갈 데 없는 도시빈민들은 살인적인 철거와 단속으로 삶을 위협받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피땀으로 건설한 전기, 가스,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마저 외국에 팔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일제와 군사독재 정권에 빌붙어 제 잇속만 챙겨온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언론과 수구 기득권세력은 외세에 영합하여 백방으로 민족 분열을 부추기면서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구나 반통일·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소지가 분명한 테러방지법마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월혁명을 짓밟았던 박정희의 기념관 건립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42년 전 이승만 독재 아성을 맨주먹으로 무너뜨린 우리 4월혁명 동지들은 이러한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의 양심세력들과 연대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고 민중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불퇴전의 각오로 떨쳐나설 것이다.

6.15 공동선언을 파탄시키려는 미국과 반통일 수구세력의 음모를 저지하고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4월혁명 영령과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피에 보답하는 길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에 우리 4월혁명 동지들은 6.15 공동선언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담보하는 근본 열쇠임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비극을 끝장내고 미완의 4월혁명을 완결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자주·민주·통일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촉구한다.

4월혁명 만세! 자주·민주·통일 만세!

2002년 4월 19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 4월혁명 43주년 선언문

- 반전 · 반미 투쟁에 떨쳐나서자 -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침공으로 아무 죄도 없는 수천만 이라크 국민들이 죽음과 기아 공포에 떨고 있다. 전 세계의 양심들과 유엔도 반대한 명분없는 전쟁으로 세계 평화와 정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이라크전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가장 추악한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다. 우리는 미국의 용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쓰라린 경험을 망각한 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정권에 대해 크나큰 좌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의 불길이 언제 한반도로 옮겨 붙을지 모르는 참예한 상황에서 우리 4월혁명 세대들은 미국 호전광들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활로요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방도임을 확신하며 반전 · 반미 투쟁에 모두 떨쳐나설 것을 촉구한다.

은 거래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전쟁 책동을 분쇄하고 올해를 우리끼리 민족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자주와 평화의 해로 만들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자주주의 기세를 더욱 드높여 반세기에 걸친 미군 주둔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전쟁의 위협과 함께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침탈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으며, WTO 수입개방 압력으로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다. WTO를 앞세운 초국적 자본은 의료, 교육까지 개방을 강요하고 있고 국가 기간산업이 혈값에 팔려나가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 있어 수많은 양심수들이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고 친일파요 쿠데타의 원흉인 박정희의 기념관을 국고를 들여 세우고 있는 이상하고 불쌍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불의와 독재를 맨주먹으로 쓰러뜨린 우리 4월혁명 세대들은 지금 우리 민족을 비참한 나라에 빠뜨리고 있는 외세와 수구 반통일 세력의 책동에 맞서 6.15선언 기치 높이 들고 자주 · 민주 · 통일운동에 떨쳐나설 것을 선언한다.

- 정부는 추악한 이라크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즉시 철폐하라
- 민중 생존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한반도 평화를 사수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2003년 4월 19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 4월혁명 44주년 선언문

- 민족공조로 자주통일 앞당기자 -

우리는 지금 안으로 반통일 수구세력의 발호, 밖으로 미·일의 세계제패 야욕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자주적 통일은 물론 민족의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친미수구부패 야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거를 자행,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5.16 및 12.12 쿠데타의 잔존세력, 차떼기로 검은돈을 뜯어온 부패정치세력, 지역주의에 기대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외세에 빌붙어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낡은 정치세력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쿠데타를 감행했다. 이에 맞서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수십만 민주시민들의 의로운 촛불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수구냉전 부패세력들을 전율에 떨게 했다.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국민들의 저력 앞에 의회쿠데타를 감행한 낡은 세력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친미 수구세력들은 꺼져 가는 잔명을 보존하기 위해 조·중·동의 엄호 아래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왜군 장교로 5.16쿠데타를 일으켜 4.19를 압살한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또다시 지역주의를 선동해 정권을 찬탈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부패세력들에 맞서 탄핵을 저지시키고 진보정치의 지평을 활짝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탄핵 규탄의 함성이 노무현 정권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부패한 친미 수구세력이 대통령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이라크 파병 등 현 정권이 저질러 온 역사적 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공세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들이 발생하는 등 기층 민중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한 손배 압류와 비정규직의 차별로 노동자들의 분신이 빈번하고 WTO 쌀 개방 압력, 자유무역협정 강요 등으로 농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또다시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협 속에 몰아넣고 있다. 북을 겨냥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주기적으로 강행하고 있고 최첨단 전투함정 이지스함의 동해 배치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유사시범의 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일의 제국주의 군사패권주의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선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우리 민족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민족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역사의 필연이다.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전 민중적 투쟁에 우리 4월혁명 세대들도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한다.

- 정부는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 외세간섭 배격하고 민족공조 강화하라

2004년 4월 19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총련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으며 자진해산, 귀가의사를 국민과 정부에게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연세대 교수님들이 내놓은 평화스런 해결방안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며 이 사태를 평화스럽게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강경진압 일변도였다. 일관성을 상실한 통일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었으며, 군사독재 시절보다 후퇴한 남북관계에 대한 겸허한 자기성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진해산과 귀가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건물 안으로 몰아넣고 17일부터 나흘 동안 음식물은 물론이고 의약품, 여성용품의 반입마저 철저히 차단하였다. 의약품의 반입은 최대의 극한사태인 전쟁상황에서도 용인되는 인도주의에 기반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또한 특수 테러진압요원 500여 명을 포함한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배고픔에 탈진한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유발하였는가.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가정과 학교로 돌려 보내야 하며 정부당국과 언론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폭도가 아닌 우리의 아들, 딸로 포용해야 한다.

### 요 구 사 항

1. 정부는 학생들의 자진해산 천명과 평화스런 사태 해결을 위한 각계의 중재노력을 묵살하고 진행한 진압작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2. 5,500여 명 연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연행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3.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대국민 총기사용 불사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박일룡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4. 정부와 언론은 한총련을 비롯한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비이성적 이념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5.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한총련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계당국에 올바른 통일정책과 통일논의의 보장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1996년 8월 21일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사월혁명연구소 외 29개 민주단체 공동성명

## 날치기 처리한 안기부법, 노동법은 즉각 무효화되어야 한다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영하의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몰래 모여 단 7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데 대해 노동계 총파업이 잇따르고, 성직자·교수·지식인·청년학생·시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항의 집회와 농성, 서명운동 등 무효화 투쟁에 나서고 있다. 자유당 독재정권을 타도했던 우리 4월혁명 동지들은 작금의 상황이 '60년 4월혁명과 '87년 민주대항쟁 전야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주시한다.

이번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처리는 김영삼 정권이 분장해 왔던 최소한의 개혁 이미지도 일거에 벗어던지고 과거의 독재정권과 다름이 없음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칭 문민정권의 허울이 이번 날치기 사태로 여실히 드러나 버린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 악법이었던 안기부법 독소 조항을 부활시키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법안을 밀어붙인 김영삼 정권을 이제 문민독재정권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정권이 역대 독재정권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아니하려면 하루빨리 안기부법, 노동법을 불법 날치기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무효화 시켜야 한다.

김영삼 정권이 아직도 노조 지도자들의 구속 등 강경진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오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민심이 현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국제사회에서도 민주화에 역행하는 독재정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4월혁명 동지들은 다시 자주·민주·통일의 4월혁명 정신을 받들어 안기부법, 노동법 무효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한다.

1. 날치기 처리한 안기부법, 노동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1. 파업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관계법을 국민적 합의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1997년 1월 15일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조영건

사월혁명연구소 개악안기부법·노동법무효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택 외 회원 일동

## 조선일보의 반민족·반민주적 언론폭력을 규탄한다

위대한 민중의 승리인 4월혁명은 역사 속에서의 굴종과 독재와 이간질을 가장 증오한다. 당연히 4월혁명의 투혼은 반민족·반민주 언론의 표본인 조선일보를 가장 추악한 언론폭력 배로 주목해 왔다.

조선일보는 일본군국주의에 기생하여 곡필아세하던 버릇대로 5.16 쿠데타에 빌붙어 군사 통치와 유신독재의 대변인을 자임해서 획득한 언론재벌의 물적 자산을 토대로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역정권을 추동해 냈다. 조선일보는 또한 반역사적 3당 합당의 산물인 김영삼 정권의 산파역이자 조련사로서 부패정치와 파국경제의 국가위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권언유착, 정경유착의 표본이었다. 따라서 국민은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개혁작업 과정에서 조선일보를 어떻게 처리해 내는가를 주목해 왔다.

일제 식민통치하 민족반역 수구언론의 치부를 새삼 재론하지 않더라도 조선일보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염원을 음모적으로 집요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그의 상업언론의 최대목표로 해왔다. 조선일보는 극우반공 냉전이데올로기를 전가의 보도로 하여 세상만사와 모든 사물을 흑백논리로 재단, 선한 인간양심과 민족정기를 난타하는 언론고문 행패를 자행해 왔다. 인간 육신을 짓이기는 이근안 고문기술자를 국민이 저주한다면 조선일보는 인간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또 하나의 고문기술자로 부르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는 이승만 되살리기와 박정희 신앙을 조작하여 역사의 시계바늘을 군사통치, 자유당 독재, 더 거슬러 일제 식민통치 시기로 되돌려 놓으려는 정신착란의 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자주의 민족기반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분기했던 4월혁명의 열이 오늘날 헌법정신의 근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4월의 투혼을 계승하고 깨어 있는 국민은 단호히 조선일보의 언론 쿠데타적 횡포를 용서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색깔논쟁과 용공음해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여망에 뻘뻘스럽게 도전했던 조선일보가 김대중 당선자의 민주적 선택의 귀결에서 자기반성과 자발적 개혁의 변신이 있기를 참고 기다린 일말의 국민적 관용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최장집 교수 물어뜯기에서 조선일보는 망상적 분색을 기어이 드러내고 말았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장집 교수 죽이기는 다름 아닌 김대중 대통령 죽이기이다. 만에 하나 최장집 교수의 논문이 거슬린다면 맘모스 신문사 주최의 학술논쟁을 벌이면 될 것이 아닌가.

이전의 김대중 죽이기가 야당말살과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였다면 지금의 김대중 대통

령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 합헌적 정부 죽이기, 국민 죽이기, 국민정부의 개혁 죽이기이다. 조선일보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솔직히 고백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야 추락하든 말든 조선일보의 호강을 담보했던 독재의 망령을 되살려 보자는 음흉한 흑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라야 망하든 흥하든 조선일보만 살찌면 된다는 망국적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이 안락해 하든 불안해 하든 매카시적 광란을 부추기는 반민주적 폭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진리와 정의의 구현을 위한 사상과 학문의 자유, 곧 민주주의 요체를 박살내어 암흑시대로 되돌려 인간 자체를 파괴시키겠다는 패륜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최장집 교수가 빨갱이란 말인가. 최장집 교수가 친북주의자란 말인가. 아예 조선일보는 최 교수를 간첩이라고 해야 직성이 풀릴지도 모른다. 조선일보는 온 학계·지식계가 웃고 세계 지성이 모멸하고 국민이 환멸을 느끼는 것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법률적 단죄보다도 정치적 척결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의 판단이며 역사의 심판이다.

조선일보는 마지막 양식을 되살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적 언론폭력을 집어치워라.

조선일보가 국민과 역사 앞에 대죄를 서슴지 않는 틈새를 준 것은 민주화와 개혁을 다짐 하고서도 감히 이런 사이버 언론에 손 못 대는 현 정부에도 책임의 반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개혁을 빗겨가고, 엉거주춤한 민주화정책과 통일정책에서 맴돌면서 국가보안법을 온존시키고, 이적과 반공의 재단법으로 국민을 여전히 부자유스럽고 불편스럽게 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부동과 안일주의가 계속되는 한 조선일보의 못된 언론폭력은 거듭될 것이다. 4월혁명의 주역들인 우리는 현 정부에 대해 개혁다운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충심으로 당부하면서 조선일보는 1960년 4월 19일 혁명의 불길과 함께 서울신문과 반공회관이 잿더미로 화한 무서운 역사의 심판에서 값진 교훈을 되찾기를 엄숙하게 권고한다.

1998년 10월 30일

사월혁명회원 일동

## 군사쿠데타의 원흉, 반민족·반민주 독재의 화신 기념관 건립에 반대한다!

우리 사월혁명회원들은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4월혁명의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이 땅에 지금껏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4월혁명은 박정희와 김종필 일당의 불순한 정치군인들의 쿠데타로 좌절된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더욱 통탄할 일은 반세기에 걸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정권 하에서 양산된 기득권 세력은 아직도 사회구석구석을 장악하고 민족·민주·자주·통일운동을 백방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도 군사쿠데타 잔당세력과 공동정권을 이루는 ‘대반역’을 자행하고 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이 땅의 수구세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역사의 죄인 이승만, 박정희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혈안이 되더니 마침내 최근에는 박정희 기념관마저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이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위원회 명예회장직을 맡으면서 이 기념관 설립에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한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박정희가 누구인가? 그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지원 입대한 왜군 사관 출신 장교로서 우리 독립군을 무수히 고문·학살한 파렴치한 매국노이며, 총칼과 탱크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4월혁명을 짓밟고 민족과 역사의 발전을 후퇴시킨 악명 높은 세기의 반역자요 독재자이며, 더욱이 농민, 서민의 희생 하에 재벌을 살찌우는 과정에서 청탁, 뇌물, 정실주의와 지역감정을 조장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부패한 개발독재를 정형화한 장본인이다. 이처럼 배신과 매국, 반역과 타락, 부패와 독재로 일관된 그의 일생에서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기념한다 말인가? 군사 독재자 박정희는 이 땅에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정죄받아야 하며, 결코 우상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가 박정희를 용서하니 국민은 나를 따르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독선이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의 왜곡된 민심에 편승하는 정상배적 작태를 선도하는 행위는 국민의 거센 반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박정희가 보릿고개를 잇게 했고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나 막대한 외채를 끌어들이어서 외세종속경제의 길을 트게 하여 끝내는 IMF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난을 맞게 한 장본인이다. 박정희의 숨겨진 부패와 부정·죄악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에 우리 사월혁명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박정희기념사업회를 즉각 해체하고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라
1. 정부는 반역사적인 박정희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고지원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그 명예 총재직을 사퇴하라
1. 정부와 여당은 5.16 군사쿠데타 잔당세력과 결별하고 민족과 역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1. 4월혁명 광장에서 살아남은 우리들은 외세와 반역세력에 의하여 분단된 조국이 민족·자주·민주·평화통일이 완수될 때까지 불의와 부정에 맞서 결연히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1999년 10월 13일  
사월혁명회

##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에 나서며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50년간 대결과 반목으로 치달았던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대장정에 돌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의 역할이다.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혜를 찾고 국민들의 여론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힘이 언론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이 땅의 수구 반통일 언론들은 그들이 냉전시대에 구축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남북화해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의 대세를 되돌려 놓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걸핏하면 사상논쟁을 벌여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불순세력의 음모로 매도하고 남북 속도조절론과 북한불변론 등 궤변으로 냉전적 사고를 부추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개폐를 극력 반대하고 독재자 박정희 미화에 앞장서고 있는 신문도 바로 조선일보이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으로 남아 있는 한 민주화와 통일의 길은 요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월혁명은 민주화와 통일을 꾀방 놓고 있는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운동이야말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당면한 실천과제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조선일보 거부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조선일보가 친일과 독재찬양에 앞장서온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조선일보가 개과천선할 때까지 조선일보의 취재에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독 거부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1년 8월 2일

사월혁명회



## 통일방북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난 1년 동안 남북간에는 여러 차례 당국자 회담은 물론이고 금강산민족대토론회와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남북농민통일대회가 연이어 성사되고, 경제인·학자·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방북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는 등 반세기를 넘긴 통일염원의 실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8.15 56돌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같은 남북의 화해와 민족대단결의 대장정이 실현되기까지 온몸을 초개와 같이 내던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소중한 통일애국인사들은 국가보안법에 얽매어 여전히 탄압받고 있습니다. 특히 99년 평양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로 방북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인 본회의 라창순 회원을 비롯하여 이성우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의장, 황혜로 한총련 대표 등 통일방북인사들은 아직도 냉전과 분단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사슬에 묶여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남북의 화해와 민족대단결을 해칠 뿐 아니라 나아가 6.15남북공동선언 정신 자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조국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와 라창순, 이성우, 황혜로 등 통일방북인사의 즉각 석방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방북통일인사의 석방 없이는 어떠한 통일논의도 허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창순, 이성우, 황혜로 등 통일방북인사를 당장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01년 8월 4일

사월혁명회

##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2001 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해외 민간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성사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내년 북측 대표단의 서울 방문을 합의하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의의가 큰 민족공동의 광복절행사를 성사시킨 방북 대표 7명이 사소한 꼬투리를 빌미로 구속 송치되었다. 우리는 이번 구속사태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의 통일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폭거로서 냉전수구세력의 입지만 키워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반통일 세력은 냉전이데올로기를 부활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거액의 세금 포탈 혐의가 드러난 보수언론들은 실추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대표단의 우발적인 행동을 침소봉대하고 마녀사냥식 왜곡보도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민족의 이익보다는 집권야욕에 어두운 한나라당은 ‘평양광란극’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해가며 6.15남북공동선언을 파탄시키려고 방북대표단을 헐뜯고 있다. 평양광란극을 벌인 것은 방북대표단이 아니라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들은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통일운동 진영을 고립시키고 통일분위기를 냉전분위기로 전환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

미리부터 공공연하게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의 하나로 준비한 범민련 협의회가 무슨 문제가 있으며 연방제를 주장한 강령을 6.15공동선언 실천으로 바꾼 행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강정구 교수의 방명록 서명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면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북대표단 구속은 통일에 대한 민족의 희망을 꺾는 몰지각한 행위로서 소모적인 남남, 남북 갈등을 불러올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킨 주체답게 보수 반통일 진영의 흉계에 휘말리지 말고 7명의 방북대표단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김규철, 임동규, 문재룡, 김세창, 박종화, 전상봉, 강정구씨를 즉각 석방하라
2.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통일문제를 정쟁에 악용하지 말라
3.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01년 9월 1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 주한미군의 재판권 포기 거부를 규탄한다

1. 주한 미군은 지난 6월 13일에 일어난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살인범죄에 대한 정부의 재판권 이양요구에 대해 8월 7일 '공무 중 사고에 대한 재판권 포기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갈가리 찢겨진 두 꽃다운 여중생의 시신과 함께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2. 이번 사건은 평소에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를 다시 한 번 드러내 보여준 것으로, 그들이 입으로는 혈맹이니 우방이니 너까리지만 실은 자국의 독선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이 땅에 주둔한 점령군에 불과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3. 자기 영토 안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기본적인 자주권에 속하며, 남의 나라에 와 있는 미군은 마땅히 주둔국 국민의 생명과 자주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방패삼아 그동안 수많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뻔뻔한 구실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으며 단 한 번도 재판권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차체에 한국전쟁 중 미군이 저지른 무수한 양민학살도 그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야만적 범죄 행위도 우리 국민을 멸시하는 미군의 오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궤를 같이 한다는 데 주목한다.

4. 우리는 또한 주한미군의 이 같은 오만방자한 태도가 미국의 패권주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번 두 여중생 압사사건의 책임은 일개 장갑차 운전병이나 그 상급 지휘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십자군"이요 "전쟁의 해"요 "악의 축"이요 하는 망발로 미군 병사들에게 병적인 강박관념과 우월감을 부추겨 인격을 황폐화시킨 미군의 최고통수권자 부시에게 있다. 우리는 온갖 구실로 세계 도처에서 긴장을 조성하여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5.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에 우리 자신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절감한다. 애당초 미군을 이 땅에 불러들여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고 불평등한 SOFA협정으로 치외법권적 지위를 허용한 것도 사대 매국적 역대정권이었으며, 그동안 온 나라에 승미 사대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미군이 우리를 업신여기도록 자초한 것도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음을 통감한다.

6. 이에 우리는 SOFA의 독소조항 폐기와 나아가 전시작전지휘권 회수 등 자주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간곡히 촉구하면서, 앞으로 온 국민과 함께 나라의 자주권 회복과 궁극적인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더욱 뼈아픈 각오로 반제·반세계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2년 8월 7일

사월혁명회

##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규정 철회,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한다

우리는 2000년 6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이 땅에서 냉전시대는 가고 민족화해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 설렘을 억제할 길 없었다. 그리하여 남북 당국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철폐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따라서 '이적행위'라거나 '정치수배자'라는 낱말은 냉전시대와 함께 역사 속으로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같은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냉전시대적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아직도 100명에 가까운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으며, 300명이 넘는 정치수배자가 거리를 헤매야 하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외세로부터의 간섭을 거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주장하면서 실천에 나선 사람들이 수배되거나 투옥되고 있다.

또한 임금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단체교섭권을 주장하고 노조활동을 한 사람들이 실정법위반으로 입건 투옥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범민련이나 한총련은 '연방제통일방안'을 그 강령에서 삭제하는 등 '이적단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기변화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은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는 자주적 통일을 향한 남북화해와 교류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리하여 각종 형태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져 민족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2월 5일, 마침내 철용성 같기만 했던 휴전선 비무장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뚫리게 되었다.

이 같은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새 시대적 소망과 현실에 걸맞게, 이제 더 이상 민족화해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활동했거나, 빼앗긴 민중생존권을 되찾고자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거나 수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해마다 일반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당선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수배자가 되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관행도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친북적이라고 해서 투옥하거나, 정치수배라는 이름으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사법적 횡포가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사월혁명회는 전민중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범민련과 한총련, 한청 등에 대한 이적 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천부적인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고, 정치수배는 하루빨리 해제되어야 한다

2003년 2월 7일  
사월혁명회

## 이라크 침략과 정부의 파병계획을 규탄한다

전세계를 휩쓴 사상 최대의 반전시위와 유엔의 거부조차도 무릅쓰고 미국 패권주의자들이 3월 20일 마침내 이라크 침공을 강행함으로써 인류역사상 가장 더러운 침략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오늘날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주범, 지구상의 '악의 축'은 바로 미국 자신이며, 제거되어야 할 가장 위험한 인물은 광기와 독선과 탐욕의 화신인 부시 자신과 그 일당임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되었다. 초보적인 인륜 도덕과 상식마저도 깡그리 무시하고 유엔헌장과 문명사회의 국제규범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 전쟁광들의 이번 폭거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민중의 세찬 도전과 저주에 과묵히 치욕의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짓밟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미국의 전쟁놀음에 반대하여 저들의 패권주의를 파탄시키는 것이 오늘날 전세계 평화애호민과 남북한 7천만 겨레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국익"과 "한미동맹"을 들먹이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하고 파병계획을 공표한 노무현 정권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분노를 느낀다.

침략전쟁을 지원하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국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평화를 옹호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 행위이다. 또한 정부는 이른바 "한미동맹"을 들먹이지만, 알량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어디에도 태평양 지역을 벗어나 유엔의 목적이나 의무에 반하여 자행하는 미국의 일방적 무력공격을 지원할 의무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온 세계가 이라크 침략에 반대하는데도 유독 노무현 정권이 미국에 아부하여 괴롭치한 "국익"을 탐내는 파병 7개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은 문명사회의 조롱거리이며 우리 7천만 겨레의 수치이다. "대등한 한미관계" 운운하던 노무현 정부가 집권 한 달도 못 되어 미국에 굴복, 더러운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몬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죄악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주적 입장에 서서 당당하게 침략전쟁에 시중들기를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전세계 평화애호민들, 자주와 평화를 염원하는 애국시민들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저지하고 정부의 파병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 이라크 침공을 규탄한다!
-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결사 반대한다!

- 정부는 이라크 침략 지지와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켜라!
- 인류의 적, 미 제국주의를 반대한다!

2003년 3월 20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 4월혁명 정신 계승하여 6.15 공동선언 실현하자

올해로 4월혁명이 있는 지 43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1960년 4월혁명 때 꽃잎처럼 스러져간 열사들의 영전에 고개를 숙이면서 결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외치며 일어섰던 4월혁명의 정신은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퇴색하기보다는 더욱 선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1960년 4월의 외침과 피의 교훈은 이 땅에서 미국의 간섭을 끝내지 않으면 그 어떤 민주주의도 완성될 수 없고, 진정한 자주와 통일도 이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6.25전쟁으로 분단이 고착되기 시작한 50년대 미국은 한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면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지원하였고, 잉여농산물과 원조로 대미 예속 경제체제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여전히 한미동맹의 명목으로 한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IMF와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43년 전, 성난 민중들에 의해 쫓겨났던 이승만과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반통일 수구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남아서 민족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 분단을 찬양하면서 승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중들은 4월혁명 이래 끊임없이 투쟁하였고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높이에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4월혁명에서 제기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숭고한 이념이 더욱 높이 발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월혁명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는 길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올바르게 이행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4월혁명 정신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조국의 자주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자 임무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월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합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운동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4월혁명 영령 앞에 반성적 자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백여 년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을 포함한 청년운동이 오늘처럼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역사의 선봉대로서 오늘의 청년운동이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분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선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18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전상봉

## 민족자주 기치 아래 4.19 합성을 다시

역사적인 4.19 민중항쟁이 있는 때로부터 43돌이 됩니다. 43년 전 그날, 전국의 거리를 메우며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정치깡패들이 동원되는 살벌한 총칼탄압에도 굽히지 않고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히 싸웠습니다.

43년 전 그날, 진달래꽃만큼 붉게 타오르던 4월의 봉기는 친일파들이 미국의 힘을 빌려 세운 반민족적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동족의 피를 부르는 야만적인 폭압의 공포를 극복한 우리 민중은 마침내 이승만 정권을 거꾸러뜨리고 말았습니다.

4월혁명을 통해 청년학생들과 애국민중의 기개를 영웅적으로 과시하였고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남김없이 시위하였습니다.

4월혁명은 민중이 힘을 합쳐 하나의 대오로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때, 그 어떤 독재의 아성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혁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4월혁명은 자주 민주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중들의 항쟁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4월혁명은 이후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운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61년 4월 19일, 4월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학생과 국민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고 외치며 민주혁명의 승리를 겨레의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4.19가 불러온 희망의 숨결은 5.16 군사쿠데타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젊은 피와 순결한 염원으로 꽃망울을 틔우던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중의 염원은 일본 제국주의 관동군 출신의 한 독재자와 이를 지원한 외세에 의해 무참히도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3년 많은 것이 변하였고 많은 진보와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19 투사들이 피 흘리며 절규하던 염원의 많은 부분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미국의 내정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예의 멍에를 쓰고 있다 할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이 땅의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할 것을 '호소'하면서 미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적한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56톤 장갑차에 짓밟혀 무참히 살해당했음에도 미군사병에게는 무죄의 판결이 내려졌고 우리는 이를 눈 뵈히 뜨고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은 다시, 북의 핵위협을 이야기하며 7천만 겨레를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게 될 대북 전쟁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은 모든 민중과 청년학생들이 4.19의 정신을 되살려 외세와 냉전수구세력들을 반대하는 반미·반전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 민중은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나아가는 화해와 단합의 행보를 막기 위해 통일운동에 훼방을 놓는 미국과 친미 사대 보수세력의 반통일 책동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11기 한총련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한국 학생운동의 대표조직입니다. 11기 한총련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치열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강요하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내고 겨레의 자주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초개와 같이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11기 한총련은 우리 민중들과 함께 43년 전 4.19의 투사들처럼 떨쳐 일어나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헌신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4월 18일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정재욱

## 미국의 한반도 전쟁연습에 반대한 애국학생들과 이규재 선생을 즉각 석방하라

정부는 8월 7일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미국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반도 전쟁연습을 맨몸으로 저지한 애국학생들을 구속하고 이에 항의한 노령의 통일선봉대 총대장 이규재 선생마저도 구속한 데 이어, 미군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경처벌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빈번한 한반도 전쟁연습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날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폭거이다. 민족절멸의 한반도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애국청년들의 당연한 의무일 뿐 정부가 나서서 처벌할 일이 아니다. 민족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청년학생들이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어온 빛나는 전통이며 바로 4월혁명 정신이기도 하다.

미국에 대해 당당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저버리고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땅에서, 우리 민족을 상대로 전쟁연습을 벌이는 외국군대를 두둔하고, 이에 항의할 국민의 권리마저 부정하면서 모든 사안을 오직 허울 좋은 한미동맹이라는 미국 중심의 예속 논리를 잣대로 재단한다면, 이는 남북간 화해 협력의 당사자로서의 의무와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나 민족은 영원하다. 전쟁을 막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남북간의 화해 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수치스러운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탈퇴하며, 나아가 작전지휘권을 회수하고 구시대의 공수동맹을 본 딴 예속적 한미군사동맹을 폐기, 자주국방과 민족공조,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민족사적 과제를 앞에 두고 그 누구도 반전평화를 절규하는 청년학생들의 절박한 애국적 열정을 단죄할 도덕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책동에 반대하다가 구속된 한총련 학생들과 노 애국자 이규재 선생을 즉시 석방하라.

2003년 8월 21일

사월혁명회

## 이라크 파병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월남전처럼 헤어날 길 없는 수렁에 빠진 미국이 한국정부에 5천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해온 데 대해 전국 곳곳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날이 갈수록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분노의 함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오로지 미국의 패권과 석유 장악을 위한 추악한 제국주의 전쟁이었음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제시했던 전쟁개시 근거는 모두 실제 없는 여론 조작으로 밝혀졌다. 그들이 주장했던 대량살상무기는 이라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알 카에다와 후세인의 연관성도 근거없는 허구로 드러났다. 이라크를 해방하겠다는 명분으로 진주한 미군들은 이라크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국의 과립치한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전투병까지 추가 파병한다면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수억의 중동지역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며 전세계인들로부터 명분 없는 침략전쟁의 공범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미국의 한국군 파병 요구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우리 돈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이라크에 파병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파병을 시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항상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4월혁명 세대들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터에 우리의 자식들을 미군을 위한 총알받이로 내모는 일이 벌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는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를 즉각 단호히 거부하라

2003년 9월 25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 지역갈등·세대갈등 조장하는 수구언론은 각성하라

지난 3월 12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속에 16대 국회는 납득할 만한 이유나 뚜렷한 명분 없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국가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합법을 위장한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민주수호의 염원을 담은 '촛불시위'를 벌였다.

불과 2주 사이에 연인원 150만 명이 참여한 촛불시위는 대통령탄핵-하야공세를 통한 수구세력의 득세를 원천 봉쇄했고 국민들은 17대 총선을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민주축제의 장'으로 부활시켰다. '탄핵과 부패정치'를 주도한 세력을 표로써 심판하겠다는 국민적 의지는 총선참여의 열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 과정에서 망국적 지역갈등 해소, 참여를 통한 정치개혁의 가능성 고조, 젊은 층의 정치냉소주의 극복 등 긍정적 징후들이 나타났고 군부독재시절 갈가리 찢겨졌던 우리 사회는 '민주수호', '탄핵무효' 합성 속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수구 기득권세력에게 정치개혁의 징후는 '위기'였으며 지역갈등 극복 기미는 '자신들에 대한 사망선고'로 받아들여졌다. 급기야 수구 기득권세력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부 수구언론을 앞세워 4.15 선거판을 다시 지역간·세대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국가를 뒤흔들 '쿠데타 선동'에는 침묵하면서 정동영 의장의 '실언'을 정치쟁점화하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탄핵심판론'을 몰타기 하는 한편 '선거판의 혼탁상'이나 '후보자들의 선거범위반행위' 등을 부각해 '정치냉소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맞서 4월혁명을 주도한 세대로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수구 기득권세력과 일부 언론의 국민을 배반한 여론조작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 1. 세대간 갈등조장을 중단하고 '노년층'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우리는 정동영 의장의 실언을 옹호해 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정동영 의장은 여당대표로서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한 쿠데타 선동'에는 침묵하면서 '실언'을 정치쟁점화해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우리 사회 일부세력의 행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정동영 의장의 '실

언'을 계기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탄핵심판', '부패정치심판' 열망을 몰타기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세대간 갈등을 선동하는 일부 기득권세력과 여론조작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언론에 경고한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탄핵철회와 부패정치 청산을 통한 정치개혁 실현이다. 노년층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해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몰타기 하려는 잘못된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이 심판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일부 노인단체에도 당부한다. '정동영 의장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설 때 지금 그러한 행동이 특정정파에 악용당하고 있지 않은가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도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고 실언을 했다. 잘못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을 하되 특정정파의 이해에 앞장서고 있다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아름답게 처신하기 바란다.

## 2. 친일 독재자의 망령에 편승한 '지역감정조장'을 경계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박정희 신드롬'을 등에 업고 사그라져 가던 '지역감정'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지역갈등을 자극해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집단과 수구언론은 지역감정 불씨를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여론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박정희 신드롬'을 경계한다. 우리는 일부 언론에 묻고 싶다. 박정희를 '보릿고개의 영웅'으로 추켜세우면서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이다. 그는 1939년 한반도 침략의 수괴 일왕 히로히토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한 뒤 항일독립군을 학살한 친일민족반역자이기도 하다. 어디 그뿐인가. 그가 여순반란사건에 가담해 좌익에 부역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1960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그는 '반공'을 내세우며 수많은 민주인사와 시민을 투옥·구금·고문·사형시켜 전 세계가 그에게 '독재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의 딸이 야당대표로 선출되자 AP, AFP 등 외신은 "야당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재자의 딸을 선택했다"고 전세계에 타전한 바 있다. 오늘날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초래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라는 사실을 일부 언론들은 왜 모른 척하는가.

언론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모를 알 권리가 있다. 언론은 더 이상 왜곡되고 치우친 정보로 '박정희 신드롬'을 부활시키려 하지 말라. 신지역주의를 부추겨 4.15총선에서 수구 기득권세력의 지분을 확보시키려는 일련의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3. 투표참여로 정치개혁의 장을 열어가자

우리는 투표참여율 하락을 유도하는 수구 기득권세력과 일부 언론의 여론조작행위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젊은이들의 투표참여 없이 탄핵심판 부패정치심판은 가능하지 않다. 4.19혁명에 앞장 설 즈음 우리도 젊은이였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섰지만 이듬해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뒤 12.12, 5.18,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격동 속에서 귀밑머리가 희어졌다. 늘 역사는 젊은이들에게 정의 를 위해 나서라고 요구해 왔다.

우리는 민주수호를 위해 목숨 걸고 4월혁명에 나섰다. 여러분은 4월 15일 투표에 참여해 깃뻏힌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4월 15일에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2004년 4월 6일

사월혁명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민족정기선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4월혁명정신 계승하여 이라크 파병 철회시키고 민족공조로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 4월혁명 44주년에 즈음한 결의 -

1960년 4월 그날의 함성으로부터 4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통일의 제단에 목숨을 바쳐 꽃잎처럼 스러져간 4월혁명 열사들의 영전에 고개 숙이면서 결의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월혁명 정신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이었습니다. 또한 4월혁명 정신은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려는 자주통일의 정신이었습니다.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을 몰아낸 민중들은 이 땅에 온존하는 모든 모순의 뿌리가 분단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자각에서 4월혁명 이후 민자통이 결성되는 등 각계각층에서 통일 열망은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은 남북 청년학생간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제안하며 선봉적으로 통일투쟁을 이끌었습니다.

4월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한 민중들의 자주통일의 흐름에 가장 크게 당황한 세력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이남을 경제수탈지로, 반공 전초기지로 계속 유지시켜야 했던 미국은 강력한 반공정부를 원했고, 그것은 5.16 군사쿠데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민중들의 민주화와 자주통일의 열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완의 혁명으로 그쳤던 4월혁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도, 진정한 자주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월혁명으로부터 44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4월혁명의 정신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미완에 그친 4월혁명을 계승하여 완수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거부하는 민족자주의 합의이며, 친일과 친미, 그리고 분단으로 연명해온 사대매국세력들의 존립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민족통일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반동의 준동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오늘의 정세는 4월혁명 직후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시대 발전을 거스르려는 퇴행과 반동의 흐름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들은 강력한 민족적 단합과

공조로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지켜내고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면하여 미국이 벌이고 있는 더러운 침략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침략동조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군대가 재건과 평화의 유지균일 수 없습니다.

최근 이라크는 제2의 베트남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사설경비원 사체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팔루자를 포위 봉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라크 민중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라크 민중들은 침략군대인 미군에 맞서 제2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침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의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한국군 파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4월혁명 정신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보다 이라크 파병을 철회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 시기 반미·반전투쟁은 곧 6.15공동선언 이행투쟁입니다. 민족공조를 현실화시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내는 투쟁인 것입니다.

44년 전 4월혁명을 청년학생들이 앞장서 수행했듯이, 이라크 파병 철회투쟁, 6.15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청년들이 선봉에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4월 17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전상봉

## 유신독재정권의 핵 박근혜는 즉각 정계에서 물러나라

요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파시즘의 망령이 횡행하고 있다. 벌써 사반세기 전에 비명에 간 독재자 박정희를 우상화시켜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수구세력들의 준동이 예사롭지 않다. 그들은 민족반역자요 독재자인 박정희를 경제발전의 주역인 양 찬양하며 박정희 신드롬을 재현하려 획책하고 있다.

유신정권 시절 독재자에 빌붙어 부와 영화를 누리던 수구세력들은 파렴치하게도 폭군의 딸인 박근혜를 앞세워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뿌려 놓은 지역감정과 색깔론을 무기로 다시 정권을 거머쥐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모든 검은 음모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유신독재정권 때 6년간이나 퍼스트 레یدی 역할을 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야말로 국민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학살한 유신정권의 핵이요 유신본당 그 자체이다. 박근혜 대표는 자기 아버지 박정희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박정희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진정 자기가 존경한다는 박정희식의 반민주·반통일 정치를 하고 싶어 야당 대표자리에 연연하는지 묻고 싶다.

박 대표도 알다시피 박정희의 일본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이다. 그는 일왕 히로히토에게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는 혈서를 쓰고 충성을 맹세하여 왜군 장교가 돼 항일독립군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친일민족반역자이다. 그가 해방이 되자 재빨리 국군장교로 변신, 남로당 군사조직책으로 암약하다가 세불리하자 동료들을 밀고하여 생명을 부지한 경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얘기이다.

1961년 민족사의 찬연한 꽃인 4.19혁명을 짓밟고 쿠데타로 집권한 뒤 반공을 내세워 수많은 민주인사와 시민들을 고문하고 투옥, 사형시켜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악명을 떨친 바 있다. 그의 딸인 박근혜가 야당 대표로 선출되자 외신들은 야당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독재자의 딸을 선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민족반역자의 딸이 제1야당 대표로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국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요 고통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표 자신이 유신독재의 핵이었고 지금도 굳은 신봉자임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의 즉각적인 정계퇴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운운할 자격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운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으로 수호된 것이기 때문이다. 6.15 통일시대인

지금도 반공을 국시로 생각하고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는 통일을 말할 자격도 없다.

박근혜 대표가 역사의식이 희박하고 지역감정에 취해 있는 일부 추종세력들을 의식하고 반민족적·반통일적인 저질발언으로 나라를 정체성의 혼란에 빠뜨린다면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민주시민들의 퇴진요구를 무시하고 출세에만 집착한다면 자기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표가 일말의 양심과 역사의식이 있다면 마땅히 속죄할 기회도 없이 비명에 간 아버지를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소름끼치는 역사반동의 시대가 다시 우리 앞에 재현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독재와 불법이 난무하던 시대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계퇴진운동에 국민적 힘을 모아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표는 아버지 박정희의 죄과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즉각 정계에서 떠나라.

둘째, MBC주식 30%, 부산일보 주식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권력으로 강탈한 장물이므로 즉각 내놓아야 한다. 더구나 국회의원 세비를 받고 있으면서 장학회 이사장 월급으로 1100만 원이나 받고 있다니 도덕성을 의심받을 일이다.

셋째, 박정희가 외국에 빼돌린 거액의 비자금의 유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부분은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즉각 조사에 나서 진상을 밝혀라.

넷째, 박정희가 교주로 돼 있는 영남대학교, 박 대표가 과거 이사장으로 있었던 영남대학교는 청구대와 대구대를 상납이란 미명으로 빼앗아 만든 대학교로 알려져 있다. 영남대학교에 얽힌 의혹을 밝히고 학교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2004년 8월 18일

독립유공자유족협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민족정기선양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70년대민주노조운동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혁당사건유족회

##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는 1980년대 가열찬 통일운동 과정에서 제기되어 발전을 거듭해 왔다. 더욱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화해와 자주적 통일의식이 한층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통일운동의 내용과 실천은 훨씬 풍부하고 활기차게 전개되어 왔다.

아울러 미군철수 운동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국가보안법폐지논의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 같은 통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마침내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반세기가 넘는 분단 지속을 가능하게 했던 악법으로 냉전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 다수 민족구성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세의 뒷받침으로 분단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1948년 12월 ‘한시적 비상조치법’으로 제정되어 분단정권과 함께 존속되어 오고 있는 분단유지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이 자주, 민주,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통일원칙을 선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다. 그리고 1991년 남북 동시 유엔가입을 통해 남과 북이 엄연한 주권국가임이 국제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근본전제가 부정되었다.

또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함으로써 북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간의 교류활성화를 천명함으로써 남북 적대관계는 소멸되었고,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 하에서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전 민족구성원이 겪어야 하는 온갖 민족적 불행과는 상관없이 분단을 매개로 하여 일신의 안락과 특권을 누려오고 있는 친일 친미 수구기득권 세력들은 반통일적 통치수단을 변함없이 유지 온존시키고자 한사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부 반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체입법이니, 부분 개정이니, 폐지 후 형법 보완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은 한다면서도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통일적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존치시키려 발버둥치며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족이 자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자면 가장 먼저, 서슴없이 폐기처리 해야 할 법률적 장애물이다.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분단시대의 산물이므로 새로운 세기, 민족화해와 통일시대를 맞아 더 이상 존치될 명분은 아무것도 없다.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참되게 발전시키고,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켜가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2004년 9월 9일  
사월혁명회원 일동

## 자주통일의 길

---

2005년 4월 13일 인쇄

2005년 4월 15일 발행

발행처 : **사월혁명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1 파고다빌딩 302호

전화 722-3630 / 전송 722-3687

인쇄처 : **[주]디앤비애드**

서울시 중구 인현동 192-30 신성상가 418

전화 2263-6331 / 전송 2263-6330

---

※ 이 논집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